

농협 개혁 '시동'...금품선거·내부통제 손본다

중앙회장 권한 제한·선거제도 개편 추진 감사기구 신설·농식품부 감독 권한 확대

농협의 내부통제 부실과 금품선거 논란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혁이 추진된다. 감사기구 신설과 지배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을 통해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농식품부 특별감사(2025년 11월 24일~12월 19일)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1월 26일~3월 6

일)에서 드러난 농협의 취약한 내부통제와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와 농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의 바탕으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김중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협동조합 및 지배구조 분야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혁안의 핵심은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다. 정부는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역조합, 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계획이다. 감사기구는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설치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없는 감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을 의무화하는 한편, 금품수사나 형량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직무 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중앙회와 지역조합 등에 한정된 감독 권한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직위와 업무 경직도 제한한다. 인사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주요 운영 사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등 조합원 중심의 통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원조합 지원자금인 무이자 자금의 재량적 배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앞으로 자금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권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은 중앙회장 선거에 농민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

재 조합장 1110명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에서 제기된 금품선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직선제나 선거인단체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의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 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제한 등 감독 규정과 내부 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중앙회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1단계 개혁안"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포함한 2단계 개혁 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의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 부처와 농업인 단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개혁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새농민회 대의원 정기총회 청년농 육성·취약층 지원 확대

농협 전남본부가 전남 지역 선도 농업인 조직인 새농민회의 결속을 다지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농협 전남본부는 11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새농민 전남도회 임원과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새농민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과 김성열 한국새농민 전남도회장, 문재용 한국새농민중앙회장,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보고와 함께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수지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새농민 조직 활성화와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농협 전남본부는 11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한국새농민 전남도회 임원과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남새농민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광주도시공사, 영구임대 직접모집...대기기간 단축

절차 40일 축소...23~31일 우산빛어울채 예비입주 300명 모집

광주도시공사가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입주자 직접모집에 나선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3~31일까지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우산빛어울채 영구임대주택 12형 예비입주자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의 가장 큰 변화는 공사의 직접모집이다.

기존에는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부터 순위 확정까지 광주시를 거쳐야 해 약 100

일이 소요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시민 편의를 위해 시와 협의를 거쳐 이를 직접 모집하는 방식으로 개편. 전체 기간을 60일로 단축하며 40일가량의 시간을 줄였다.

일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1인 가구 세전 572만45원 이하)로 완화했다. 총자산 2억4500만원·자동차 4542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장기화된 미달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실제로 해당 주택은 연말까지 총 100세대의 빈집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유호 대기자는 6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사는 보수적인 실계약 전환율 50%를 적용해 모집 규모를 300명으로 설정했다.

자격 완화 세대는 최초 2년 거주 이후 1회만 재계약 맺을 수 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가'군이 보증금 239만8000원(월 4만 7700원), 일반 '나'군은 보증금 716만 3000원(월 9만4000원)이다. 양동민 기자

신협, 고영철 회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

관리 중심 조직→사업·실행 중심 체계로 재편 직제 147→123개 축소...40대 본부장 전진 배치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회장(사진)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과 정가인사를 단행했다. 관리 중심 조직을 사업·실행 중심 체계로 재편하고 조직 규모를 축소해 의사결정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조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월 정기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조직 재편으로, 기존 관리 중심 체계를 사업·실행 중심 구조로 전환하고 조합 지원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일부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직제는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축소됐으며, 영역별 이사와 부문장 등 관리체계도 함께 축소해 의사결정 효율성과 조직 운영의 민첩성을 높였다.

또 투자금융본부와 연계대출본부를 통합해 업무 시너지를 높였으며, IT개발 조직은 중앙회 업무와 조합 업무 지원 기능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담당관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신협은 △



국제협력담당관 △개인정보보호담당관 △사금융세탁방지담당관을 신설해 대외 협력과 디지털·준법분야의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조직의 활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젊은 실무형 인재를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 기존 50대 중 심이던 본부장 체계에 40대 인재를 대거 발탁하면서 세대교체와 조직 혁신의 의지를 반영했다.

본부장 인사에서는 기존 전원이 50대였던 체계를 바꿔 40대 본부장 13명을 새롭게 선임했으며, 10~15년차 실무 인력도 팀장급에 적극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생 직원이 팀장으로 발탁되며 젊은 리더십 기반도 한층 넓어졌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회의 실행력을 높이고 조합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신협이 협동조합 업무와 조합 업무 지원 기능으로 구분해 전문성과 대응력을 강화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담당관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신협은 △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시, '중동 정세 불안 대응' 비상경제 TF 가동

물가 관리·석유 유통 점검·수출기업 지원 강화 국제유가 상승 따른 지역 경제 충격 최소화 총력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가 물가 관리와 석유 유통 점검,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경제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지역 경제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경제 대응 TF는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물가 안정 △석유가격 안정 △수출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 관리에 나선다. 국제유가 상승이 지역 물가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민생물가 관리에 힘을 쏟는다. 물가모니터링단을 통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을 월 3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역 석유판매업소 249곳(일반대리점 4곳·주유소 245곳)을 대상으로 10일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유통·보관 여부 △석유제품 품질 기준 적합 여부 △정량 미달 판매 등 법령 위반



광주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지역 경제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행위 △수급 보고 정확성 및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석유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수출기업 지원에도 대응력을 높인다. 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수출 기업 피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광주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또 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지원비율 50%→70% 상향 추진...3월 구매비 소급 적용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유 가격이 오르면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커져 정부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다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월에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 단가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운송원가에서 유류비 비중이 높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약 38만대와 노선버스 1만6000대, 택시 2만7000여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4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50%만 지원했지만, 이를 7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이달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평균 유류 사용량 약 2402ℓ 일 경우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 한도인 17당 183원을 적용하면 월 최대 44만원가량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